

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

2014. 1. 16

목 차

I. 한국경제의 3대 허들

- 1. 저성장 함정 2
- 2. 新샌드위치 위기 3
- 3. 주체들간 대립프레임 6

II. 5대 대응과제

- 1.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7
- 2.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8
- 3. 취약부문 육성 9
- 4.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10
- 5.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십 구축 10

I. 한국경제의 3대 허들 - 1. 저성장 함정

세계경제 : 본격회복 불투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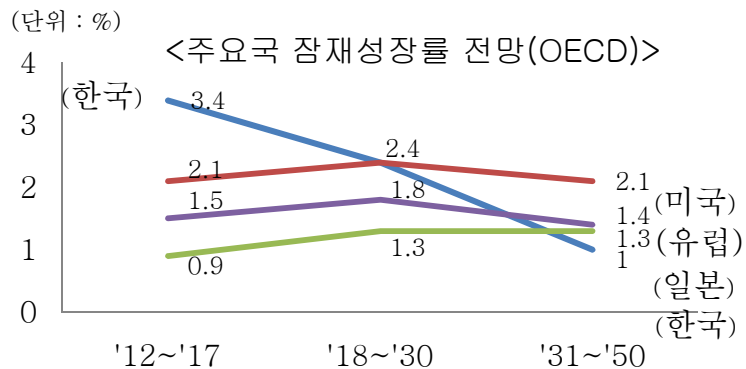
- 세계경제는 최근 회복중이나 본격회복여부 불투명
 - 수급불균형을 양적완화로 임시해결해 근본문제 여전
- 경기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(매킨지)
 - 한국전쟁 이후 30년간 GDP변동성은 평균 4.5%
 - 1980년대 중반 이후 인위적 경기조절 → 2.1%로 축소

■ 세계경제 본격회복 장애 및 변동성 확대요인

- 선진국 : 경기회복 위한 양적완화, 재정적자 확대
 - 버블가능성 상존 → 본격회복에 찬장효과
- 신흥국 : 생산설비, 건설투자 등 대규모 투자 지속
 - 성장통/경착륙 時 → 세계성장엔진 역할 불투명
- 버블/재정적자/생산과잉 등으로 본격회복에 한계
 - 국가간·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

한국경제 : 저성장 함정

- 한국경제는 최근 성장률이 세계평균 수준 회복
 - * GDP성장률(%전년비): 1.5(12.4Q)→1.5(13.1Q)→2.3(13.2Q)→3.3(13.3Q)
- 잠재성장률은 미국(2018년)/유럽·일본(2031년) 하회전망



■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요인

- 가계부채부담 누적 → 소비/투자 위축
 - 가계부채규모(조원): 723.5('08년)→843.2('10년)→963.8('12년)
- 주력산업 세계공급과잉 → 수익악화, 신규투자 위축
 - 과잉생산비율(%): 자동차 43.9, 철강 40, 석유화학 23.6
- 저출산·고령화 심화 → 노동력약화, 연금부담 증가
 - 65세이상 비중(%): 11('10년)→15.6('20년)→24.3('30년)

I. 한국경제의 3대 허들 - 2. 新샌드위치 위기

(1) 선진국의 제조업 르네상스

미국 제조업부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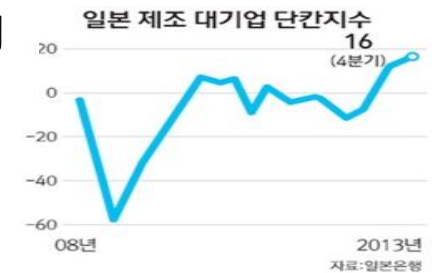
- 셰일가스혁명으로제조업활기
 - 관련산업 투자확대, 전방산업 경쟁력강화 등
 - 美 '20년까지 2.1% 추가성장효과(피터슨국제)
- 3D프린터혁명으로제조역량강화
 - 시장수요 실시간 반영, 창의적 제품개발 등
 - '19년까지 관련시장 연평균 9% 성장 전망
- 제조업 지원정책
 - 법인세 인하(35%→28%, 제조업 25%)
 - 해외진출기업 유턴 지원 등

- ① 미국의 제조업비중과 고용자수 확대
 - GDP 대비 제조업비중 : 12.4%('09년)→ 13.3%('12년)
 - 제조업 고용자수 : 1,150만('10년)→ 1,200만명('13년)
- ② 미국기업의 본국회귀 러시
 - GM: 글로벌 아웃소싱 → 미국내 생산비중 확대
 - Otis: 엘리베이터 생산시설 이전(멕시코→미국)
 - GE: 가전부문 해외생산시설 본국이전, 추가투자확대

일본 아베노믹스

- 양적완화로 거시경제 활성화.엔저시대
 - 디플레이션극복, 소비활성화등
 - 엔저(원/100엔): 1,247('12년말)→ 1,005('13년말)
- 제조업 지원정책
 - 법인세 인하 : 40%→38%('12년)→35.6%('15년)
 - 공장입지 규제완화, 벤처투자 법인세 감면

- ① 일본 제조업 체감지수 상승세
 - '13.4Q 단칸지수 6년래 최고치
- ② 일본 제조기업 유턴 Boom
 - 샤프, 소니, 파나소닉
 - 해외공장 축소, 본국공장 확충



EU 신산업정책

- 제조업 비중확대 추진 : 16%('12년)→ 20%('20년)
- 제조업 지원정책
 - 제조업 경쟁력영향평가 도입, 규제스마트화 등
 - 해외진출기업 유턴지원, 지역별 생산기지 유치

- ① 유로존, 제조업경기 상승세
 - 제조업PMI 3년래 최고치
- ② 해외로부터 자금유입 확대
 - 증시 호전 등



I. 한국경제의 3대 허들 - 2. 新샌드위치 위기

(2) 신흥국의 산업구조 고도화(기술격차 축소)

중국

- 고급두뇌 유치, 해외기업 M&A로 선진국기술 캐치업
 - 해외학위자 국내복귀 유도(千人계획)
 - 해외기업 M&A, 최근 5년새 6배 급증(볼보, SAAB 등 인수)
- 차세대 미래기술 개발 등에 대규모 R&D 투자
 - R&D 투자 규모 : 1,782억불('10년, 세계2위)
- 7대 국가전략신흥산업 선정해 첨단화·대형화 추진
 - 신에너지자동차, 신에너지, 신소재, 첨단설비, 바이오, 차세대IT, 에너지절약환경

아세안

- 저임노동력의 고부가가치화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
 - 포스트차이나로 부상. 의류·섬유산업 등은 중국추월
- 외국인직접투자 급증
 - '09년 474억불 → '11년 1,165억불. 중국 FDI(1,240억불)에 육박

중동

- 원유생산 넘어 석유화학제품 제조·수출 추진
 - 사우디와 UAE 등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 투자
- 석유의존경제에서 탈피해 산업의 다각화·고부가가치화 추진

✓ 신흥국의 세계 GDP 비중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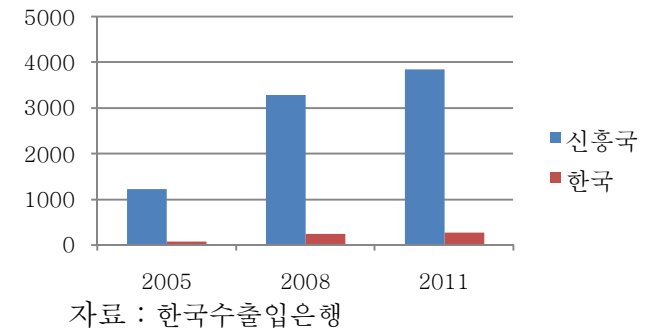
- 신흥국 : 37.0% → 50.4%
- 한국 : 1.8% → 1.9%
- * 자료 : IMF, '00년 → '13년

✓ 신흥국기업, 포춘500대기업 약진

- 신흥국: 85개(17%) → 130개(26%)
- 한국: 10개(2%) → 14개(2.8%)
- * 자료 : 포춘지, '00년 → '13년

✓ 신흥국 해외직접투자, 규모&속도 ↑

<신흥국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(억\$)>



I. 한국경제의 3대 허들 - 2. 新샌드위치 위기

(3) 국내제조업 경영환경 악화

노동관련 부담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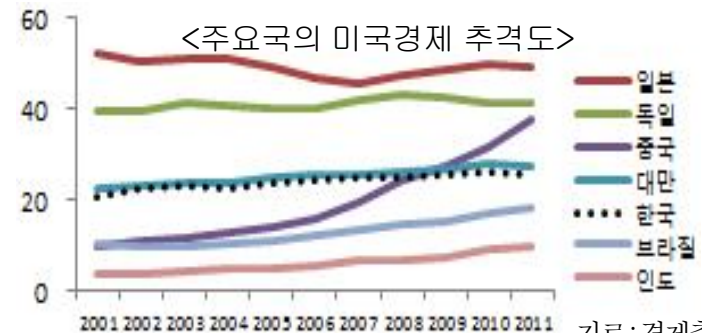
- 최근 도입된 부담
 - 정년연장, 비정규직 차별금지 범위 확대,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
- 도입예정 부담
 - 근로시간 단축, 사내하도급 관련 규제,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

환경관련 규제강화

- 최근 도입된 규제
 - 화학물질 보고의무(화평법), 유출사고 처벌(화관법) 강화
- 도입예정 규제
 - 배출권 거래제, 자원순환 부담금, 환경피해입증책임 등

제조업 활력 약화

- 제조업 매출액증가율 둔화 (한은)
 - 18.5%('10) → 13.6%('11) → 4.2%('12)
- 제조업 경쟁력순위 하락 (딜로이트&美경쟁력위)
 - 3위('10) → 5위('13) → 6위(2018)
- 최근 10년 경제추격속도 신흥국 질주, 한국 제자리



자료: 경제추격연구소

각종 규제 신설
(국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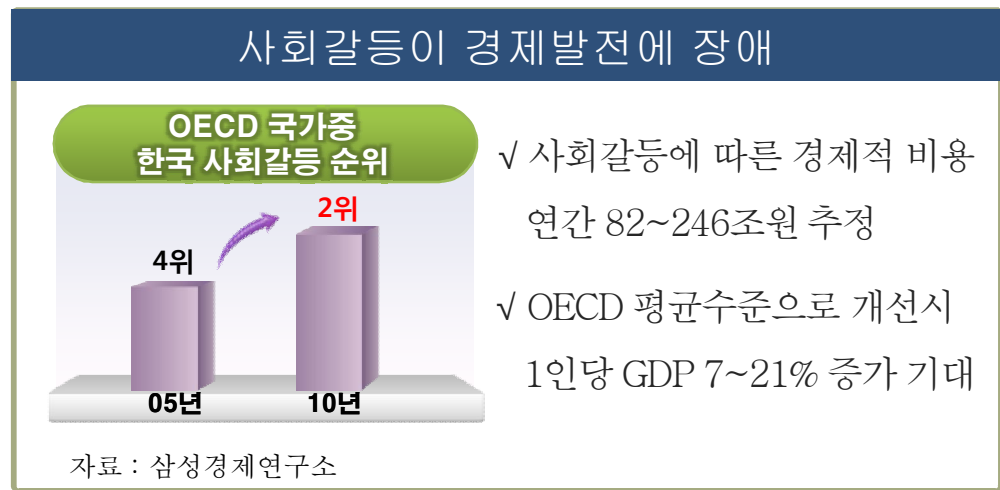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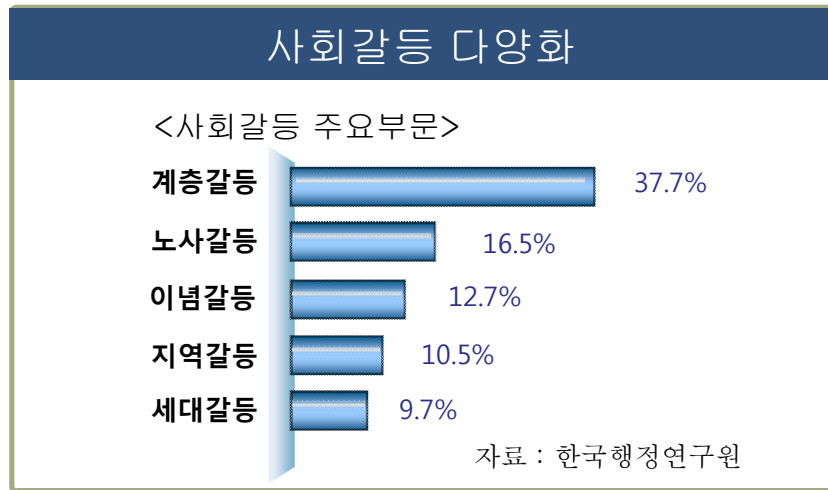
제조업 경쟁압력
(선진국)

한국경제
(新샌드위치위기)

기술격차 축소
(신흥국)

I. 한국경제의 3대 허들 - 3. 주체들간 대립프레임

■ 사회갈등과 대립적 사고의 프레임 → 위기극복 동력 약화



대립프레임
고착화

화합과 협력
약화

위기극복/국가발전
동력저하

끓는 냄비속 개구리처럼 안일대응하면 경제후퇴, 국력약화

II. 대응과제

1.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

현주소

- 경제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
 - 모방·추격형 성장, 대량생산·H/W역량으로 한계
 - 신기술, 신시장에 맞는 신가치 창출이 중요
 - 창의와 혁신이 시대코드
- 과거방식의 관행과 시스템 온존
 - 기업부문에선 상명하복, 연공서열주의 여전
 - 우리기업문화, 글로벌기업의 60점수준(상의조사)
 - 여타 부문에서도 비정상적 관행 상존
- 자원배분, 비효율적
 - 교육·인력 : 이공계 기피, 정규직 과보호(청년실업) 등
 - 자금 : 부동산 700조원 vs. 벤처기업 자금애로
 - 기업가정신 : 반기업정서 등 → 창업위축

대응과제

- 창의와 혁신풍토 확산
 - 기업 : ICT융합, 창의와 혁신 실천
 - 사회 : 실패용인·도전격려, 연대보증관행 개선 등
 - 인프라 : 인재양성, 신기술가치평가체계 확립
-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
 - 준법경영(불공정거래, 리베이트관행 해소 등)
 - 실질중시(형식주의와 적당주의 타파)
 - 자생력 강화(정부의존관행 탈피) 등
- 왜곡된 자원배분시스템 교정
 - 교육 : 주입식 교육 → 창의와 자기계발 교육
 - 인력 : 고용유연성, 일가정 양립, 고령자 재고용
 - 사회 : 기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

II. 대응과제

2.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

현황

■ 기술과 시장환경 급변

- 3D프린터, 사물인터넷 등 파괴적 기술혁명 속출
- 인구구조(고령화, 1인가구 등)와 소비자기호 급변

■ 경쟁단위 변화 : 개별기업 → 네트워크/생태계

-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, 경쟁-협력관계 수시변화
- 기술표준과 플랫폼 선점, 산업생태계 구축 중요

■ 변화대응에 실패하면 1위 기업도 몰락

- 시대변화 대응실패 (코닥, 휴렛팩커드)
- 기존의 핵심역량 안주(노키아, 소니)

대응과제

■ 시대흐름 통찰, 사업과 핵심역량 재구축

-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(GE, 환경·에너지부문 진출)
- 사업재정의 (IBM, 컴퓨터판매 → 컨설팅)

■ 인재와 시스템에 의한 기업운영

- 기업미션과 가치확립 위한 사내소통 활성화
- 기업내부에 핵심인재양성, 후계프로그램 운영등
- 공유·협업시스템 구축, 창의적 기업문화 형성

■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

- 국내외 협력사와의 파트너쉽 구축, 상생협력
- 기술표준, 플랫폼에 대한 경쟁과 협력 강화
- 시장신뢰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

II. 대응과제

3. 취약부문 육성

현황

■ 수출-제조업-대기업 중심 성장

- GDP대비 수출비중 : 38.6%('00년) → 56.5%('12년)
- 제조업의 GDP대비 비중 : 22.4%('00년) → 28.5%('12년)
- 전체 기업매출액 중 대기업 비중('12년): 65%

■ 수출의 낙수효과와 제조업 고용효과 약화

- 수출이 내수에 미치는 낙수효과 약화
 - 부가가치 유발계수 : 0.62 ('05년) → 0.54('11년)
 - 수출유발 취업자수 7.3명 vs. 소비 15.3명
- 제조업 취업유발효과 약화
 -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(명): 제조업(8.7), 서비스업(15.8)
-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사례는 3곳 불과 (풍산, 오투기, 이랜드)

대응과제

■ 서비스산업 육성

- 규제완화(특히 교육, 의료, 관광 관련분야)
- 고부가가치화(제조업수준 R&D, 투자·창업 지원)
- 수출산업화(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)

■ 중소기업 육성

- R&D지원(산학협력 및 출연연구보유기술 이전등)
- 해외진출 지원(전시회 참가, 무역보험 활용 지원)
- 기업승계 지원(공제폭확대, 요건과 추정부담개선)

■ 지역경제 활성화

- 유관기관 패키지지원, 지역 클러스터화 촉진
- 지역기업의 창조와 혁신풍토 조성

II. 대응과제

4.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

미래위험요인

■ 미래에 예상되는 5대 충격요인

- (1)인구(신흥국 고소득인구, 국내고령화)
- (2)통일(단기충격, 통일비용, 재도약기회)
- (3)환경(기후변화, 에너지수급 불안 등)
- (3)파괴적 기술혁명(3D프린터 등)
- (4)글로벌 경제위기 재발가능성 등

대응과제

■ 기업

-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·대응역량 강화
- 구조적 유연성 제고(핵심역량/응용력 강화)

■ 정부

- 거시경제안정성 점검 (핫머니 유출입 대응 등)
- 국제사회와의 공조 확대(남북관계, 경제위기 등)

5.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십 구축

현황

■ 향후 3년이 재도약과 후퇴의 분수령

-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경제력 강화경쟁 치열

■ 정부도 474비전제시, 경제혁신3개년계획추진

*474비전잠재성장률4%,고용률70%,국민소득4만불실현

대응과제

■ 소통과 화합

- 사회구성원간 국가비전과 목표 공유
- 화합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
- 소통 통한 올바른 지식공유 및 대응책 마련

■ 474비전 실현에 국력재결집

- 정부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
- 기업을 비롯한 국가사회는 이를 적극 실천